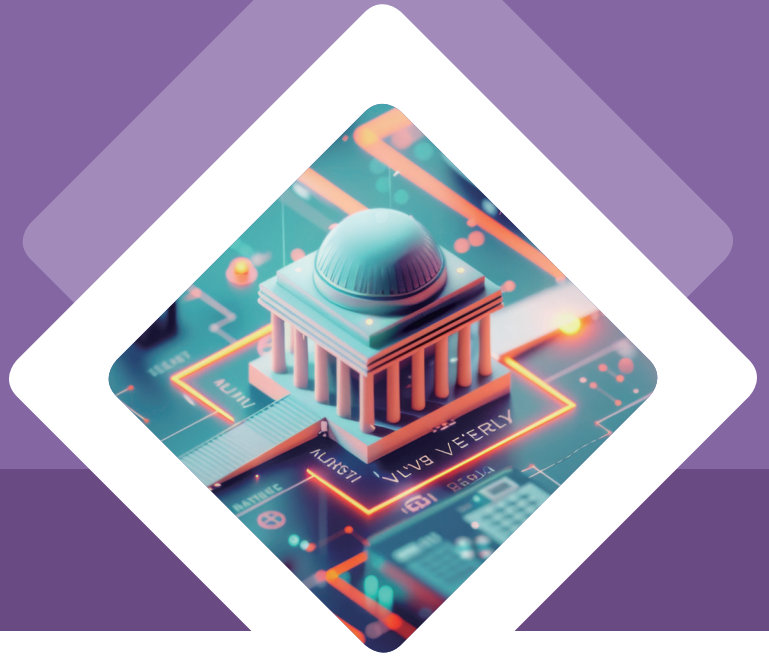


글로벌 트렌드로서의 GovTech와 GovTech의 유형화

GovTech as a Global Trend and
Typification of GovTech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전자정부 모델이 정부 업무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던 반면, 디지털 정부는 국가 전체의 디지털전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형태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민·관 협력과 혁신 생태계의 진화를 강조하는 GovTech이 부상하였다. GovTech은 정부(Government)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공공서비스 개선과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 기술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GovTech의 개념과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GovTech 사례를 바탕으로 GovTech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GovTech 사례들을 검토하여 GovTech이 실현되는 층위, 기대효과에 따라 GovTech의 유형을 거버넌스 수립형, 아이디어 공모형, 플랫폼 활용형, 문제 해결-기업 성장 동시추구형, 혁신 연구형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 이론화가 부족한 GovTech 분야에서 사례 기반의 GovTech 유형화 시도는 추상적인 GovTech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GovTech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유형화 연구를 바탕으로 GovTech을 실현하려는 목적,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 기대효과에 따른 맞춤형 GovTech 정책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실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유두호 선임연구원 walnut@spri.kr
김숙경 초빙교수 bigcandy@kaist.ac.kr

Globally, governments are leveraging digital technologies to innovate public services and explore new governance models to address societal challenges. While traditional e-government models focused on digitizing government operations and services to emphasiz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digital government aims to solve societal problems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entire nations. As governments increasingly utilize data and digital technologies, there has been a rise in GovTech, which emphasiz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evolution of innovation ecosystems, leveraging ideas and technologies from the private sector. GovTech, a combination of “government” and “technology,” refers to innovations driven by technology that aim to improve public service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global trends of GovTech and attempts to classify different types of GovTech based on case studies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Asia, and South America. Specifically, the study categorizes GovTech into five types based on the layers of implementation and expected outcomes: governance establishment, idea crowdsourcing, platform utilization, problem-solving with simultaneous business growth, and innovation research. Since GovTe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and lacks theoretical foundation, this case-based attempt to classify GovTech helps clarify the abstract concept and provides fundamental data for GovTech policy development. Furtherm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ormulation of tailored strategies based on the purpose, approach, and expected outcomes of GovTech implementation.

I. 연구의 배경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효율적인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을 추구함

- 특히,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
 - 기존 전자정부는 정부 업무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디지털 정부는 국가 전체의 디지털전환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전자정부를 통한 풍부한 데이터 확보와 더불어 AI, IoT,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

- 따라서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의 전자정부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게 됨

■ 정부의 형태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민·관 협력과 혁신 생태계의 진화를 강조하는 GovTech이 부상함

- GovTech의 개념은 정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Government)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공공서비스 개선과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 기술을 통한 혁신 주도를 의미함
 - FinTech가 금융 분야의 기술 혁신을, AgriTech가 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을 의미하는 것처럼, GovTech은 정부 부문의 기술 혁신을 의미함
- GovTech은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 및 체계를 포괄하며,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부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혁신은 정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셜벤처, 시민 등 여러 주체의 참여가 강조됨
 - 또한, 공공 조달 체계의 개선, 행정업무의 효율화 등과 같은 제도의 변화부터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적 프로세스를 통한 혁신 생태계의 변화까지 기존 공공 생태계와는 다른 유연한 방식을 포괄함

■ 우리나라에서도 GovTech에 대한 개념이 정교화되기 시작하면서 GovTech을 실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국정과제 11번에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GovTech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 본 연구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GovTech의 개념과 동향을 살펴보고 GovTech의 유형화를 시도함

- 다양한 GovTech의 정의를 검토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해외 및 국내 GovTech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함
- 주요국의 GovTech 사례를 중심으로 GovTech이 실현되는 층위, 기대효과에 따라 GovTech을 유형화 함
 - 그동안 GovTech의 개념을 살펴보거나 조달 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GovTech을 유형화한 연구는 부족했음

-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GovTec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GovTech의 유형화를 통해 개념을 정교화하는 시도가 필요함
-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 유형화 연구를 통해 GovTech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GovTech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이는 각 국가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발전된 형태의 GovTech에 대한 공통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다양한 추진 방식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함임
 - GovTech 분야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론화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모든 신생 분야의 이론화를 위한 전형적인 절차로서 사례 기반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데 의의가 있음
 - 나아가 유형화 연구를 통해 GovTech을 실현하려는 목적,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 기대효과에 따른 맞춤형 GovTech 정책 전략 수립에 기여함

II. 글로벌 트렌드로서의 GovTech

1. GovTech의 개념

■ GovTech의 주요 개념과 내용을 종합할 때, GovTech은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제공과 공공문제 해결의 혁신을 의미함

- (목적)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 정부·공공의 문제 해결
- (주체) 정부, 중소기업·스타트업, 소셜벤처, 시민 등 다양한 공공과 민간 참여자
- (방식) 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정부의 협력, 기존 공공 조달 체계의 혁신, 첨단 디지털 기술의 활용

[표 1] GovTech에 대한 다양한 정의

구분	연도	정의
PWC (컨설팅) ¹	2016	현대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가들이 현존하는 관례와 규범을 탈피하여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CivTech (스코틀랜드 정부) ²	2018	공공부문의 전문 지식과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모든 사람에게 더 빠르고 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UK GDS (영국 디지털 서비스국) ³	2018	디지털 정부를 추동하는 글로벌 트렌드로서, 민간 분야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롭고 촉망되는 분야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중남미개발은행) ⁴	2020	정부가 데이터 인텔리전스, 디지털 기술 및 혁신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기업, 중소기업 및 기타 행위자와 협력하는 생태계
OECD ⁵	2023	민첩성, 사용자 중심, 반응성, 비용 효율성을 갖춘 공공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위해 공공부문을 보완한 디지털 정부 솔루션을 구현하고자 스타트업, 혁신가 및 사내 기업가 등과 협력하는 생태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ICT 기술 기반의 기업이 데이터 및 AI 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대국민 서비스, 공공·지역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등에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솔루션 또는 서비스

자료: 강송희·김숙경⁶, <GovTech와 공공 생태계 혁신>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해외 및 국내 GovTech 동향

■ 해외에서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 운영을 효율화하는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로서 GovTech에 대한 논의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짐

- GovTech은 시민 참여 증진, 투명성 향상, 정부 서비스의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GovTech 시장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6.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⁷

* 2027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1 PWC, <Gov.Tech: The power to transform public services in the UK>(2016)

2 CivTech Website: www.civtech.scot

3 UK GDS, <Technology innovation in government survey>(2018)

4 OECD & CAF, <Digital Government Review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23)

5 CAF & Oxford Insights, <The GovTech Index 2020: Unlocking the Potential GovTech Ecosystems in Latin America, Spain and Portugal>(2020)

6 강송희·김숙경, <GovTech와 공공 생태계 혁신>, Issue Report. IS-102(2020),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7 ComCap, <ComCap's Government Technology Market Activity Report>(2022)

- 이러한 성장은 World Bank, OECD, CAF*(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GovTech 생태계 발전 촉진과 정부 기관이 혁신 기업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됨

* CAF: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의 줄임말로, 중남미개발은행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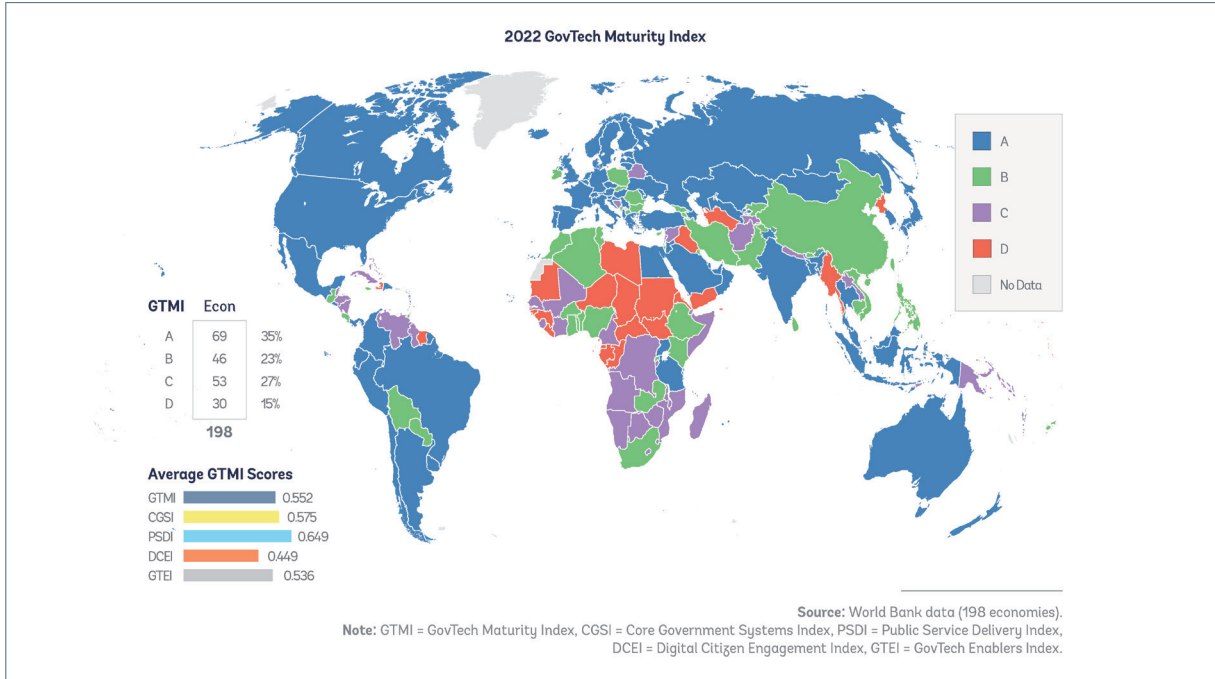
- European Commission 보고서(2022)⁸에 따르면 GovTech에 투자하는 정부의 주요 동기는 디지털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효율성과 사용자 친화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동기가 GovTech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

■ World Bank에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GovTech Maturity Index(GTMI)는 GovTech의 글로벌 흐름을 보여줌

- GTMI는 2019년 World Bank가 시작한 GovTech Global Partnership(GTGP) 이니셔티브의 핵심 구성 요소로 공공부문의 현대화와 디지털 기회 활용 지원을 위해 도입됨
 - GTMI는 국가들이 디지털 정부 혁신에서 어느 정도의 성숙도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하며, 이를 통해 GovTech 성숙도에 대한 기준과 벤치마크를 제공함
 - 최신화된 2022년 GTMI는 198개 경제권에 걸쳐 48개의 핵심 지표를 사용하여 GovTech을 종합적으로 측정함
 - * 성숙도 지수는 핵심 정부 시스템 및 공공서비스 전달의 디지털화, 디지털 시민 참여, GovTech 지원 요소 등 네 가지 중점 영역을 포함함
 - * 핵심 정부 시스템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범위와 질, 전자 납세 시스템의 효율성, 공공서비스 전달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포털의 존재와 효율성,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사용, 디지털 시민 참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시민 간 소통, 디지털 참여를 촉진하는 앱, GovTech 지원 요소는 정부의 디지털 전략 및 로드맵 존재,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정책의 효율성 등과 같은 영역으로 구성됨
- GTMI 2022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GovTech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 165개의 전용 디지털 정부 또는 GovTech 기관이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GovTech 전략 계획, 규칙 및 표준 개발,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유럽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이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아프리카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⁸ European Commission, <GovTech Practices in the EU: A glimpse into the European GovTech ecosystem, its governance, and best practices>(2022)

[그림 1] GTMI 그룹별 전 세계 GovTech 현황(2022)



자료: GovTech & KDI School, <GovTech Maturity Index 2022> Update(2022.12.)>

지역적 격차가 나타남

- *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북유럽의 에스토니아는 높은 소득 수준과 ICT 인프라를 통해 e-Estonia라는 브랜드로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자 투표(e-Voting), 디지털 신원 인증(e-ID) 등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화 함
- * 낮은 점수를 기록한 아프리카의 말라위는 인터넷 보급률이 낮고 ICT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이 낮아 GovTech 분야의 성숙도 역시 낮음. 동남아시아의 라오스도 디지털 인프라가 제한적이며 전자 정부 전략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130개국 이상이 디지털 기술과 혁신 전략 문서 및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나 약 20%만 달성한 결과에 대한 공개 정보를 게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의 격차가 존재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전자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시도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전달의 디지털화 영역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함

■ 유럽연합(EU)도 활발하게 GovTech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혁신 및 디지털전환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

- 많은 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한 GovTech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지원함

- 2009년 아일랜드의 National Digital Research Centre 설립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스페인, 폴란드, 영국 등의 순으로 관련 GovTech 프로그램을 론칭하여 진행 중임
- GovTech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챌린지 대회, 솔루션을 신속하게 프로토타이핑하기 위한 해커톤, 기존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공공부문의 시범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방, 중소 규모의 R&D 보조금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 GovTech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매우 제한된 예산(연간 100만 유로 미만)으로 실험 또는 파일럿으로 시작되었으며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이 입증된 후에 확장되는 형태를 보임

[그림 2] EU GovTech 프로그램 지도



자료: European Commission, <GovTech Practices in the EU>(2022)

[표 2] EU 회원국의 GovTech 프로그램

구분	설명
챌린지와 경품 제공 (Challenges and priz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하는 GovTech 프로그램의 가장 인기 있는 방법 - 공공부문은 직면한 문제들을 공개, 혁신가들의 해결책 개발을 장려 - 우수한 해결책은 재정적 보상 및 공공부문 인프라 활용 기회를 제공받음 - 공공부문의 위험 분산, 규모가 작은 이해관계자 대상화, 기술 및 문화적 적합성 조기 확인의 이점이 있는 반면, 스타트업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내부 평가 기술 요구 등의 단점 존재
해커톤 (Hackath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스프린트 형태로 솔루션의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을 목표로 함 - 이 과정에서 외부의 재능을 동원하여,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초기 모형 솔루션을 개발 - 공공 기관이 문제를 식별하고 해커톤을 개최하여, 참가 팀들이 솔루션 프로토타입을 제작 - 해커톤 종료 후 우수한 솔루션은 상금이나 계약 기회가 있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Acceleration program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제약이 있는 구조화된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으로, 기업 성장 가속화 목적으로 진행 - 수 주~1년 지속되는 코호트 기반 프로그램 - 창립자들과 체계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적 필요에 맞춰 내용 조정 가능 - 공공부문이 첫 구매자 역할을 하는 적절한 환경 마련이 중요한 자원 집약적 접근 방식
파일럿 프로그램 (Pilo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비지분 기반의 자금을 제공, 공공부문 인프라 기반의 실험 지원 - 공공부문과 함께 엄격한 규칙하에 일정 기간 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파일럿을 진행 - 성공적인 파일럿을 위해 공공부문은 데이터베이스, 연구개발 시설 등 인프라 개방 필요 - 공공부문이 기업과의 시장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특정 내부 역량 필요 - 이를 통해 공공부문은 대규모 자원 투입 전에 제품과 서비스를 초기에 테스트 가능
연구개발 보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gr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단계 자금 지원으로 연구 및 개발 가속화 기여 - 중소 규모의 보조금으로 공공부문 내 실험 문화 장려 및 사설 부문 투자자 위험 분산 - 자금 사용에 대한 제약이 적고 서류 작업이 최소화됨 - 많은 시간 소요될 수 있어 정치적 리더십의 인내 필요
생태계 구축 (Ecosystem buil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네트워킹 및 자문 서비스 - 의사결정자 및 전문가와의 접근 개방을 통해 무료 자문 및 피드백 제공 - 월간 모임, 이해관계자 간 연결 장려 등을 통한 다양한 상호작용 기회 창출 - 초기에는 혜택이 비가시적일 수 있으므로 조직 문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

자료: 강승희·김숙경, <GovTech와 공공 생태계 혁신>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최근 중남미 지역 국가들도 GovTech을 통한 공공부문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

- CAF가 GovTech 스타트업 확장 및 공공부의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지원함으로써 GovTech 활성화가 촉진됨
 - CAF는 LAC(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및 전 세계적으로 GovTech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을 통해 다수의 스타트업은 데이터 인텔리전스, 블록체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원함

- 다수의 중남미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GovTech Leaders Alliance를 형성하여 전 세계적으로 GovTech 전략에 대한 공통 원칙을 홍보하고 구현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함
- CAF에서 2020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GovTech Index를 통해 스타트업 산업, 정부 정책, 조달 시스템 세 가지를 기준으로 LAC 지역의 GovTech 정도를 평가하고 GovTech 생태계 마련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함

■ 우리나라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등장과 함께 GovTech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GovTech 관련 사업도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ovTech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함
 - 2024년 3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한 혁신적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 GovTech 창업기업을 발굴, 체계적인 육성프로그램 지원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GovTech 산업 활성화 TF’를 중심으로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 GovTech 기업 성장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음

III. GovTech의 유형화 시도

■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있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GovTech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함

- GovTech의 유형화 시도는 여러 GovTech 사례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핵심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데 기여함
- GovTech의 유형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여 GovTech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GovTech 유형화는 GovTech을 실현하려는 목적,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 기대효과에 따라 맞춤형 GovTech 정책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GovTech 유형화 기준은 사회혁신 유형화 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Bottom-up 방식을 통해 사례를 먼저 검토한 후 기준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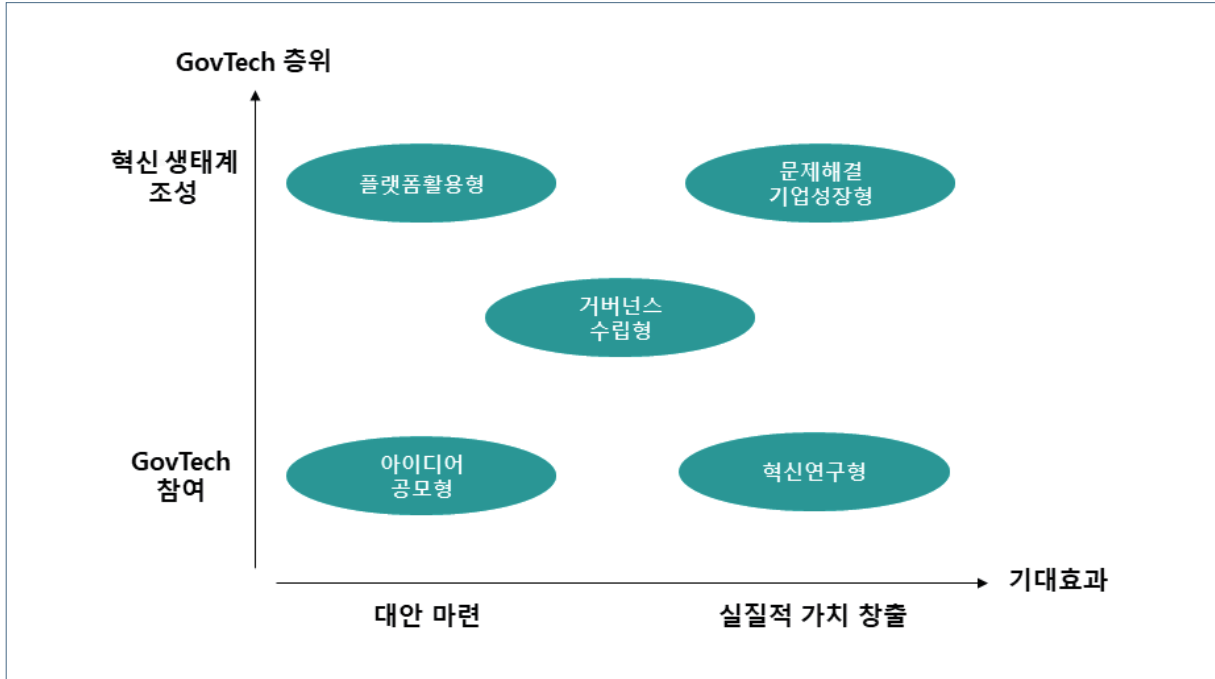
- 사회혁신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해결책의 모색을 의미함⁹
-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등에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솔루션을 뜻하는 GovTech와 의미가 유사하므로 유형화 기준 수립의 참고가 될 수 있음
- 사회혁신 유형화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시 수준의 비즈니스 혁신부터 거시 수준의 사회혁신까지 층위를 기준으로 한 유형화가 시도됨¹⁰
 - 미시 수준은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혁신이 해당되며, 거시 수준은 사회난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시스템 변환, 사회혁신 생태계가 해당됨
-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유형화 연구는 Bottom-up 방식으로 사례들을 검토하여 추구하는 가치, 운영방식을 유형화 기준으로 활용함¹¹
 - 추구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중 각 사례가 창출하는 가치(기대효과)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의미하며, 운영방식은 정부 주도의 방식과 시민 참여 위주의 방식으로 구분됨
- 본 연구 또한 유형화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GovTech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각 사례들은 크게 GovTech이 실현되는 층위와 기대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GovTech 층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참여 차원의 미시적인 수준부터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플랫폼을 활용한 체계적인 GovTech 확립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시 수준까지 GovTech은 층위가 존재함
 - (기대효과)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정도부터 대안이 실현되어 실질적인 가치가 창출되는 정도까지 GovTech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남
 -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국가의 GovTech 사례들을 검토하여 GovTech 층위, 기대효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GovTech 유형을 설정함

⁹ 엄영호·손선화·장용석,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균형잡기 역할의 모색>(2018), 지방정부연구, 21(4), 369-389

¹⁰ 정서화, <사회혁신의 이론적 고찰: 개념의 유형화와 함의>, 기술혁신학회지(2017), 20(4), 888-914

¹¹ 엄영호·손선화·장용석,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균형잡기 역할의 모색>(2018), 지방정부연구, 21(4), 369-389

[그림 3] GovTech의 유형



1. 거버넌스 수립형

■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률과 전담조직 또는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방식

- GovTech의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GovTech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 방향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일부 주체들의 참여로 GovTech을 시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 적합한 방식이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질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함

■ (미국) USDS와 18F를 통해 정부가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킴

- USDS(US Digital Service)는 2014년 8월 백악관에 의해 설립되어 주요 정부 기관에 최신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여 정부 시스템을 개선함
 - 정부 기관의 디지털 서비스를 단순화하고 연방 웹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 행정부문과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프로젝트로는 이민 서비스 효율화, HealthCare.gov 웹사이트 개선 작업, Login.gov 시스템 개발, Vets.gov 웹사이트 제작이 있음
 - * HealthCare.gov :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보험료 보조금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정보 등 건강보험을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 * Login.gov : 미국 연방 정부의 통합 로그인 시스템으로 여러 정부 웹사이트와 서비스에 대해 안전하고 간편한 인증을 제공. 사용자들이 단일 계정을 통해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 * Vets.gov : 미국 재향군인부(VA)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재향군인과 가족들이 의료, 교육, 재정 등 VA 서비스와 혜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18F는 미국 총무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산하의 디지털 서비스 팀으로, 연방 정부 기관들의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지원
 - * GSA의 본부 건물은 “18th Street NW와 F Street NW” 교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이 교차로의 이름에서 “18F”라는 이름이 유래됨
 - * 연방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하여 정부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을 현대화함.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IT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임

■ (브라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GovTech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2021년 도입된 LCP 182 법률을 통해 GovTech 생태계를 강화함

- LCP 182는 스타트업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 공공부문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GovTech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 LCP 182는 포르투갈어 “Lei Complementar n.º 182”의 약자이며, Lei Complementar는 브라질 법률 체계에서 법률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법을 의미
 - 공공부문이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형태의 공공조달을 시도하고 스타트업의 참여를 장려
 - 스타트업이 공공서비스 제공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도전과제를 정부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완화된 규칙을 제공

■ (한국) 한국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형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GovTech 산업 육성 관련 사업도 추진 중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내에 GovTech 산업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과 GovTech 기업 성장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을 모색

2. 아이디어 공모형

■ 중소기업, 스타트업, 시민 등이 경진대회 및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식

-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에 용이함
-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보완이 필요

■ (한국)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도전, 한국’을 진행하였고,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ovTech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함

- ‘도전, 한국’은 구체적 문제 제시와 파격적 보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온라인 공모 플랫폼(Challenge.gov, 2010년~)¹²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문제 해결 혁신 프로젝트임
 -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며, 아이디어 공모→심사→포상의 절차로 진행됨
 -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대응을 긴급 공모로 제시하였고 2022년에는 ‘도전, 지자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아이디어 발굴의 활용도가 큼
 - 반면, 일회성 재정지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GovTech 창업경진대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창업자 발굴, GovTech 기술창업 유도를 목적으로 함

¹² 2010년 오바마 정부는(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중심, 총무청(GSA) 주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플랫폼 “Challenge.gov”를 개설함. 이에 에너지부, NASA, 보건복지부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여 현재까지 1,000여 건 이상의 과제에 2.5억 달러 상금이 지급됨

- 2024년 처음으로 실시되어 GovTech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GovTech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두 개 분야로 참여할 수 있음
 - * 아이디어 기획은 자유과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자유과제·지정과제로 참여 가능하며, 자유과제는 공공서비스 전 분야(의료, 교통, 주거, 복지 등)의 GovTech 관련 아이디어를, 지정과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요조사로 발굴한 7개 과제에 대한 서비스(솔루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3. 플랫폼 활용형

■ 플랫폼 활용형은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든 주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GovTech 유형을 의미함

-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플랫폼에 여러 주체가 가진 아이디어가 축적되면서 혁신적 참여가 극대화됨
-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며, 다양한 대안이 축적될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함

■ (싱가포르) 공유 플랫폼 CODEX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CrowdTaskSG를 운영하여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임

- CODEX(Core Operations Development Environment and eXchange) 플랫폼은 GovTech Singapore의 주요 이니셔티브로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를 재설계하는 공유 디지털 플랫폼임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 미들웨어 및 마이크로서비스를 포함한 재사용 가능한 디지털 구성요소를 정부기관 간에 공유하며, 개발자들이 리소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CODEX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기관은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도구를 활용하여 디지털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고, 이는 서비스의 품질, 신뢰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
- CrowdTaskSG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싱가포르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정부기관에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임
 - 2019년에 구상되었으며 게임화 요소, 인센티브 시스템 및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주제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A/B 테스트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정부 기관과 시민들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피드백을 수집

■ (한국) 제주도의 ‘DSI 가치더함’은 디지털 사회혁신(DSI: Digital Social Innovation)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임

- 주민 제안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로, 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
 - 신규제안 → 제안구체화 → 공감제안의 세 단계를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
 - * 신규제안: 첫 번째 단계로 제안 등록 후 30일 동안 공감 100표를 받아야 함
 - * 제안구체화: 신규제안 단계에서 목표 공감 수에 도달하면 진행되며, 30일 동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
 - * 공감제안: 다시 30일간 총 누적 90일의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공감 500개 이상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프로젝트화(크라우드 펀딩, 정책 제안,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음

4. 문제 해결-기업 성장 동시추구형

■ 문제 해결-기업 성장 동시추구형은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거두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성장을 추구함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참여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높은 GovTech 층위를 보이며, 특히, 기업 성장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창출

■ (미국) In-Q-Tel은 1999년 설립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략적 투자 펀드로서 정보 및 국가 안보 관련 최첨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함

- CIA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CIA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CIA가 식별한 문제에 대해 기술 솔루션을 찾아 투자하는 역할을 수행
- 정보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유망한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부터 정보기관이 활용할 수 있음
 - (성공사례 - Palantir Technologies) Palantir는 2003년 콜로라도 덴버에 설립된 공공부문 특화 빅데이터 및 AI 기업으로, In-Q-Tel을 통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범죄, 안전 분야 기술을 넘어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 전반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

- * 23년 9월 기준으로 매출 21억 3천만 달러, 16%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문제 해결-기업 성장 동시추구형’ GovTech 유형의 기업 성장 지원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줌

■ (영국) GovTech Catalyst는 영국의 혁신적인 공공부문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기술 솔루션을 개발

- 아이디어만 가진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GTC(GovTech Catalyst) 절차가 끝나면 해당 솔루션에 대해 정부가 구매를 보장토록 하여 GovTech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용이함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문제 제기 →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부문의 문제 해결방안 제안 → 단계적 자금 지원(1단계: 탐색 및 개발 / 2단계: 프로토타입 개발) → 파일럿 테스트 및 평가 → 성공적 솔루션 확장 및 배포의 단계로 진행됨
 - * 1단계(탐색 및 개발): 선정된 기업들은 초기 자금을 받아 솔루션을 탐색하여 실현 가능성, 기술의 타당성을 평가받음
 - * 2단계(프로토타입 개발): 초기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솔루션들은 추가 자금을 받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침. 공공부문에서는 성공적인 2단계 솔루션을 확보할 조달 프로세스를 추진
 -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폴란드) GovTech Polska는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로 정부와 기술 스타트업,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함

- 이니셔티브의 주된 목표는 공공부문 내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가속화이며, 공공부문을 시민과 기업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결하여 폴란드의 혁신 문화와 정보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문제 정의 및 공모 →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제안 접수 및 평가 →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 → 솔루션 구현 및 확산의 단계로 진행됨
 - * 접수된 제안은 혁신성, 실현 가능성,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지원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든 단계에서 협력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는 애자일 방법론을 핵심 요소로 간주함

■ (한국) 대전광역시의 ‘사회문제 해결 ICT 서비스 기술 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추진하는 지역 현안 해결 사업임

- 해당 사업은 제안 분야의 기술 및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대전 내 SW·ICT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참여기관은 지역의 제한 없이 제안 분야의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됨
 - SW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SW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과 기업 성장이 동반됨
 - 고령자, 취약계층과 같은 복지 분야, 버스와 자전거 등의 교통 분야 및 안전과 관련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시민에게 포용적 과학기술, 사람 중심 연구개발(R&D)이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함

5. 혁신 연구형

■ 혁신 연구형은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전담연구소를 설치하여 실험적 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추구함

- 프로젝트성 방식으로서 GovTech 주체들이 참여하는 낮은 층위 수준을 보이지만 비교적 단시간에 실험적 아이디어와 결과물을 도출하고 사회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강점이 있음

■ (콜롬비아) MiLAB은 콜롬비아 정부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소로 GovTech 혁신을 통해 공공부문을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둠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콜롬비아 정부의 공공혁신 실험실로서 활동하며, 공공부문의 도전과제에 혁신적이고 적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 2019년 7월 CAF와의 협약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GovTech 실험실로 발전
 -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과 실험 방법론을 사용하여 스타트업과의 협업 및 개방형 혁신 전략을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함
 - * 27개의 공공 도전 과제 식별, 35개의 GovTech 솔루션 강화, 185개 이상의 GovTech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매핑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공 조달의 혁신을 통해 정부와 민간부문 간 협력을 촉진

■ (브라질) 공공혁신 실험실 창조 마라톤으로 불리는 iLabthon은 공공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 실험적 연구 프로젝트임

- 2021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공공부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인 솔루션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로 실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됨

- 공공과 민간의 1,327명의 참가자, 132명의 멘토와 연사, 27개의 기존 공공혁신 실험실이 참여했으며*, 브라질뿐만 아니라 기니비사우, 멕시코, 모잠비크에서 새로운 공공혁신 실험실의 기반이 구축되는데 기여함
 - * 참가자들과 수혜자들은 공공기관 직원,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 자체 조직 내·외부에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공공 또는 혼합 경제 기업의 직원 등 혁신 생태계의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됨
- iLabthon의 결과, 브라질 22개 연방 단위와 4개국의 259개 팀이 참가하여 134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 협력·협동·팀워크·인내가 공공부문에서 혁신 실험실을 창조하는 데 필수 요소임을 깨닫게 함

IV.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GovTech은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제공과 공공문제 해결의 혁신을 의미하며 글로벌 트렌드로서 활성화되고 있음
- 미국, EU, 중남미 등 해외 GovTech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등장으로 GovTech이 활성화되는 추세임
- GovTech은 공통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을 강조하지만 GovTech이 실현되는 층위, 기대효과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음
 - 사회혁신 유형화 연구를 기준을 참고하여 여러 국가의 GovTech 사례를 Bottom-up 방식으로 검토하여 GovTech 층위, 기대효과 두 가지의 유형화 기준을 설정함
 - 그 결과, GovTech의 유형을 거버넌스 수립형, 아이디어 공모형, 플랫폼 활용형, 문제 해결-기업 성장 동시추구형, 혁신 연구형의 다섯 가지로 구분함

[표 3] GovTech의 유형화 정리

유형	GovTech 층위	주요 사례	방식	효과
거버넌스 수립형	중간	- 미국: USDS / 18F - 브라질: LCP 182 -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법률과 전담조직 또는 지원체계 도입	- 안정적인 GovTech 기반 마련 - 신속한 GovTech 체계화
아이디어 공모형	낮음	- 한국: 도전, 한국 / GovTech 창업경진대회	경진대회 및 아이디어 공모 방식	- 혁신 아이디어 발굴 - 기술창업 유도
플랫폼 활용형	높음	- 싱가포르: CODEX / CrowdTaskSG - 한국: 제주 DSI 가치더함	상시 운영 플랫폼을 통한 대안 제시	- GovTech 주체의 참여 극대화 -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문제 해결 기업 성장 동시추구형	높음	- 미국: In-Q-Tel - 영국: GovTech Catalyst - 폴란드: GovTech Polska - 한국: 대전 사회문제 해결 ICT 서비스 기술 개발사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체계 마련	- 문제 해결과 기업 성장의 유기적 연계 -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혁신 연구형	낮음	- 콜롬비아: MiLAB - 브라질: iLabthon	전담연구소 설치를 통해 실험적 연구 프로젝트 추진	- 실험적 아이디어와 결과물 도출 - 사회적 투명성 제고

2. 시사점

■ GovTech의 개념과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제공

- (개념) 국내·외 다양한 GovTech의 정의를 살펴보고 GovTech의 목적, 실현 주체, 운영 방식 측면에서 개념을 구체화
 -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제공과 공공문제 해결의 혁신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시장 규모) GovTech 시장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6.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7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야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선진국과 World Bank, OECD, CAF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GovTech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 (특징) 전 세계적으로 GovTech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실현되는 모습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벤치마킹이 요구됨
 - 유럽 국가들은 EU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챌린지 대회, 해커톤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확장시켜 나감
 - 중남미 국가의 경우 CAF를 중심으로 다수의 GovTech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있으며, GovTech Index를 통해 GovTech 실현 정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자원을 파악함

■ 본 연구는 기존에 크게 다루지지 않은 GovTech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여 GovTech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자원 효율성 극대화) 유형화된 GovTech을 분석할 경우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통해 GovTech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제한된 자원으로 높은 성과 달성
- (리스크 최소화) 시의적절한 GovTech 유형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실패를 최소화
- (혁신 촉진)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적절한 GovTech 유형을 도입하여 최신 기술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빠르게 향상시킴
- (맞춤형 전략 수립) GovTech을 실현하려는 목적,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각 GovTech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프로젝트 구현
 - 정부는 GovTech의 유형별 특징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적절한 주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최적의 성과 창출
 - 국가별,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GovTech 유형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성공적 결과 도출
 - 타 국가·지역의 유형별 GovTech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맞춤형 GovTech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

◎ 참고문헌

강승희·김숙경, <GovTech와 공공 생태계 혁신>, Issue Report. IS-102(2020),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엄영호·손선화·장용석,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균형잡기 역할의 모색>(2018), 지방정부연구, 21(4), 369-389

정서화, <사회혁신의 이론적 고찰: 개념의 유형화와 함의>, 기술혁신학회지(2017), 20(4), 888-91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년 디지털 활용 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안내서>(2023)

CAF & Oxford Insights, <The GovTech Index 2020: Unlocking the Potential GovTech Ecosystems in Latin America, Spain and Portugal>(2020)

CivTech Website: www.civtech.scot

ComCap, <ComCap's Government Technology Market Activity Report>(2022)

European Commission, <GovTech Practices in the EU: A glimpse into the European GovTech ecosystem, its governance, and best practices>(2022)

GovTech & KDI School, <GovTech Maturity Index 2022> Update(2022)

OECD & CAF, <Digital Government Review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23)

PWC, <Gov.Tech: The power to transform public services in the UK>(2016)

UK GDS, <Technology innovation in government survey>(2018)